

저장된 페이지 보기

칼 아이칸, 연합군 구성에 골드만 삭스와 자문 계약 / KT&G, 표대결 대비 배수진

[국민일보] 2006-02-11 10면 05판 경제 뉴스 1967자

‘창이나 방패냐.’

KT&G가 ‘기업사냥꾼’ 칼 아이칸의 경영권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. 칼 아이칸이 오는 3월 열릴 예정인 주주 총회에서 표대결을 위한 위임장 확보 등 경영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자 KT&G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문 계약을 체결키로 하는 등 적극 방어를 펼치고 있다.

◇칼 아이칸 공세 강화=칼 아이칸은 주주총회에서 아이칸 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KT &G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펀드를 대상으로 위임장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. 칼 아이칸의 국내 법률대리인 이경훈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“10인 이상의 주주를 대상으로 KT&G 주식의 의결권에 대한 위임장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관련 법정 절차에 따라 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”며 “공시 등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같은 보도는 칼 아이칸이 이미 10인 이상 다수의 주주를 접촉해 위임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취지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”고 설명했다. 이는 앞으로 공식 절차를 통해 위임장 확보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.

현재 KT&G의 외국인 지분은 60%에 이르며 KT&G는 이사 선출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고 있다.

칼 아이칸 측이 인삼공사 기업공개(IPO)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50% 이상을 장악해야 한다. 하지만 이사 자리 1~2석이라도 확보하면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다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을 올릴 수도 있어 배수진을 칠 전망이다.

◇KT&G 적극 대응=KT&G 관계자는 “골드만삭스와 경영권 방어 및 향후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재무자문 계약을 체결할 예정”이라며 “이번 경영권 분쟁 사태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게 된다”고 밝혔다.

이는 타임워너가 아이칸 쪽과 경영권 분쟁을 벌일 때도 골드만삭스가 자문사 역할을 해 아이칸에 정통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. 또 골드만삭스는 작년 말 기준으로 KT&G 지분의 1%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.

KT&G의 이같은 행보는 민영화 이후 정부 관련 지분이 계속 매각되면서 기업은행 5.85%,우리사주조합 5.75% 이외에 뚜렷한 우호지분이 없기 때문이다. 지분 7.15%를 보유한 프랭클린유추얼조차도 우호지분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다.

하지만 KT&G 지분은 우리사주조합을 11.60%(자사주 제외)를 넘어 6.59%를 보유한 아이칸측 지분보다는 앞서고 있다. 또 민영화되긴 했지만 공기업 성격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주주들이 쉽게 KT&G로 부터 등을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.

◇KT&G,백기사를 영입하나=KT&G의 경영권 방어 초점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9.58%를 넘겨받을 백기사를 영입하느냐는 것이다. 과거 SK는 삼성전자와 팬택앤큐리텔을,대한해운은 포스코와 대우조선해양을 백기사로 끌어들이는 바 있다.

우선 백기사는 기업은행이 유력하다. KT&G의 지분 5.85%를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KT&G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.

이밖에 KT&G와 사업관련이 있는 협력사와 관계사들을 끌어들이 수 있다.하지만 KT&G의 자사주 9.58%의 가격은 8000억원을 넘어서 물량부담이 큰 것이 걸림돌이다. 이 때문에 대기업간 자사주 교환도 설득력있는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다.

◇주가 영향은=표 대결에서 아이칸측의 요구가 부결될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. KT&G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한 영향이 주가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이다.

증권 전문가들은 “현재 아이칸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인삼공사의 기업공개,부동산 매각,배당 확대 등인데 이에 따른 기대감에 KT&G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”며 “그러나 아이칸 측의 요구가 주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하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”고 말했다.

남호철 기자 hcnam@kmib.co.kr

저작권자 ©국민일보.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

인쇄하기

이기사 NewsML ID : 01100201.20060210100000235

close 